

이재명 파기 환송… 광주·전남 “사법부가 정치 개입”

정치권·시민사회, 대법 판결에 반발
강기정 “널뛰기…국민투표로 결정”
김영록 “정치적 판결로 오점 남겨”
“교활한 법비들이 난 일으킨 것”

대법원이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선고를 내리자, 광주·전남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 등 각계에서는 일제히 “사법부의 선거 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선고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부 재판 결과가 1심, 2심, 3심이 매번 달라 널뛰기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사법부가 아닌 국민이 투표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파기환송 주문을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이는 신속재판이 아니라 그야말로 ‘콩 볶아먹기 식번개 재판’”이라며 “대선을 앞두고 내려진 이번 판결은 명백한 선거 개입이나 다름없는 정치적 판결로,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하는 오점을 남겼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들도 일제히 대법원을 규탄했다.

주철현(전남 여수갑) 민주당 전남도당 의원은 “대법원의 2심 판결 파기 환송은 기존 판례를 스스로 뒤집는 명백한 정치 판결이자 노골적 선거개입”이라며 격노했다.

주 의원은 “수 많은 쟁점이 존재하고, 복잡한 사실관리와 법리가 적힌 7만 페이지가 넘는 기록을 12명의 대법관을 배당한지 며칠만에 검토를 마치고 판단한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포차 식당에서 비(非)전향 노동자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파기환송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것은 현실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는 윤석열과 같은 사법만능주의에 사로잡힌 조희대가 걱정하고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작당해 벌인 사법쿠데타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대한민국 역사 이래 지지율이 가장 높은 제1당의 유력 후보에 법원이 편향적인 졸속 판결을 선고한 전례는 없었다. 이번 판결에 결코 굴하지 않고 대선에서 압승해 국민주권의 대원칙을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박지원(전남 해남·완도·진도) 의원은 “대법원의 판단은 다수 국민들이 예상했

던 것과 다른 판결이다. 고법에서 치열한 법정투쟁으로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이번 판결로 오히려 지지층은 더 뭉칠 것”이라는 의지를 다졌다.

정진욱(광주 동남갑)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파기환송판결은 정권교체를 막기 위한 대법원의 대선 개입”이라며 “내란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반드시 진압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진숙(광주 북구을) 의원은 “이번 판결은 이재명 개인을 겨누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의 입을 막고, 국민의 선택을 가로막

고 민주주의를 질식시키려는 시도”라며 “침묵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이재명 후보와 함께 법의 탈을 쓴 정치 탄압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은 윤석열의 내란과 다름없는 정치적 판결”이라며 “국민은 이를 사법부에 의한 민주주의 유린, 보수 법조 카르텔의 판결 짜맞추기라 규정하고 있다. 이번 판결이 대선을 불과 한 달 앞두고, 사건 접수 9일 만에 전원합의체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속도전’ ‘결론 짜맞추기’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

판했다.

광주시당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사법 탄압은 오히려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적 열망을 결집시킬 것”이라며 “보수 세력의 사법 쿠데타를 막기 위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강화하고 6·3 대선 승리를 통해 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대법원의 판결이 국민들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광주촛불행동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미 무죄로 판결난 사건을 대통령 선거를 코 앞에 두고 내규까지 위반하며 비정상적, 비상식적인 상고심 일정을 잡더니 말도 안 되는 판결로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고 박연 볼 수 없다”며 “또 다시 교활한 법비(法匪)들이 난을 일으킨 것”이라고 성토했다.

양재혁 5·18유족회장은 “사법부가 무언가 다급하게 짜맞추려 한 것 같다”며 “국민을 도리어 불안하게 만든 판결로 송달 30여 일 만에 이례적으로 급하게 판결을 낸 것은 뭔가 고의성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조선의 참여자치21 공동대표는 “정책 공약 유세활동보다는 정치적 공방과 진영 싸움이 노골적으로 갈 가능성이 커졌다”며 “이재명의 당선 여부를 떠나 이후 대통령이 자신의 역할을 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국면을 맞닥뜨렸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오지현·정성현 기자

1심만 2년 걸린 재판… 대법, 한달만에 초고속 선고

李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일지

작년 11월 1심 유죄→올 3월 2심 무죄
대법, 전합 회부 9일만에 선고 ‘이례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3심까지 이어진 재판 끝에 기소 2년 8개월 만인 1일 유죄 취지로 결론 났다.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 사건을 다시 재판해야 한다.

검찰과 이 후보 측의 치열한 공방과 이 후보의 단식 등으로 1심 선고에만 2년 2개월이 소요됐지만 2심은 상대적으로 속도를 내서 4개월 뒤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 3심은 예상을 거둬 뛰어넘는 속전속결로 심리를 진행해 이 후보는 21대 대선을 목전에 두고 유죄 취지 판결을 받아 들게 됐다.

대법원은 특히 지난 3월 26일 2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된 이후 36일만에 상고심 선고까지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매듭지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사건이 배당된 지난달 22일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당일 곧바로 합의기일을 진행하는 등 ‘속도전’을 주도했다.

조 대법원장은 취임 초부터 ‘6·3·3 원칙’을 강조해왔다. ‘6·3·3 원칙’은 선거법 사건 재판은 1심 6개월, 항소심 3개월, 상고심 3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이고, 선거법상 후보 등록일이 지나면 정당은 설령 후보자가 사퇴하더라도

다른 후보자를 등록할 수 없기 때문이다.

6·3·3 원칙은 임의규정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이지만 어길시 처벌 조항이 없고 법원 실무상 여러 이유로 사실상 준수되지 않아왔다.

이 후보 사건 1심은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이 길어지면서 선고까지 이례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그해 10월 18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고, 4차례 준비기일을 거쳐 2023년 3월 3일 첫 정식재판이 시작됐다. 격주 금요일 열린 재판에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황무성 공사 초대 사장, 고 김문기씨의 아들 등 수십명의 증인이 출석했다.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던 이 재판은 2023년 9월 이 후보의 단식과 구속영장 청구 등으로 두 차례 기일이 미뤄졌다.

그해 10월에는 이 후보가 국정감사 참석을 사유로 재판에 불출석해 재판이 연기되거나 이 후보 없이 진행되기도 했다. 작년 1월에는 사건을 심리해온 재판장이 갑작스레 사표를 내며 재판 지연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이후 새로 구성된 재판부는 작년 9월 20일 결심공판을 거쳐 11월 15일 1심에서 이 후보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은 서울고법이 우편으로 보낸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두 차례 이사불명

‘(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 등의 이유로 송달되지 않다가 지난해 12월 18일 인편으로 이 후보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등에 서류를 전달하면서 본격화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올해 1월 23일 첫 공판을 열고 한 달 뒤인 2월 26일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예고하며 신속한 심리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증인도 단 3명만 채택하고 증인신문 시간 역시 1시간 30분으로 제한하며 속도를 냈다. 고법 재판부는 예고대로 2월 26일 결심공판을 열었고 1심 선고 이후 4개월째인 3월 26일 무죄 선고를 내리면서 2심을 매듭지었다.

이 후보가 2심 과정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며 재판 지연 우려가 나왔지만, 재판부는 이에 대해선 기간·각각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전 국민의 이목이 쏠린 상황에서 전례 없는 속도전 끝에 상고심 접수 한달여 만에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답변서 제출 기한이 끝나자마자 지난달 22일 사건을 소부에 배당했다. 그러나 다시 즉각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을 내리고 당일 오후 곧바로 합의기일을 열어 첫 심리를 진행했다.

이틀 뒤인 24일에는 2차 전원합의체 기일을 열어 사건 쟁점에 관해 심리하고 곧바로 표결해 결론을 내린 뒤 판결문 작성 단계에 들어갔다. 이어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9일 만인 1일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연합뉴스

이재명 ‘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까지

2021년	10월 20일	이재명,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서 “국토부가 협박해 용도 변경 했다” 발언
	12월 21일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사망
	12월 22일	이재명 “김문기, 성남시장 때 몰랐다”
2022년	9월 1일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소환 통보
	9월 6일	이재명, 검찰 불출석 결정 “서면 진술 답변해 사유 소멸”
	9월 8일	검찰, 故김문기백행동 허위 발언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불구속 기소
2024년	9월 20일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징역 2년 구형
	11월 15일	1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의원직 상실형
2025년	2월 26일	2심 재판에서 검찰, 징역 2년 구형
	3월 26일	2심 무죄 선고
	4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첫 전원합의기일 진행
	5월 1일	대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조국혁신당 “극우 내란 세력의 역습” 비판

조국혁신당은 1일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 “극우 내란 세력의 역습”이라고 비판했다.

윤재관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명백한 사법 쿠데타이자, 주권자 국민의 선택을 코앞에 둔 시점에 대법원이 정치의 한복판에 뛰어들 것”

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혁신당은 이번 대선에 자당 후보를 내지 않고 이 후보를 지지하는 입장이다.

진보당 홍성규 수석대변인도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움직이더니 결국 정치 한복판에 뛰어들어 분당질을 하겠다는 선택을 했다”고 비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